

10일 본회의서 '상임위별 정수' 우선 처리...여야 협상 연장

통합당 특위 제안 수용돼...민주 6명·통합 4명·비교섭 1명 구성 민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일단 보류...법사위 등 처리 시한 미정

여야는 8일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 합의로 10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양당이 법제사법위원회·예결특별위원회 자리를 둘러싼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비교섭단체 1명은 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 구성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의 정수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국회법대로 상임위원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상임위원 정수 구성에 합의하면서 21대 국회 역시 국회법상 상임위원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한 공보수석은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까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오늘 통합당의 국회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제안을 수용한다"며 "오늘 (원 구성 협상이) 합의될 때까지는 떠나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도 "야당이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수용한다"면서도 "오늘 제안이 시간끌기를 위한 제안이 아닐지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예전처럼 원 구성을 지루하게 끌 그럴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원 구성과 함께 바로 일하는 국회로

돌입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라는 것이 관례도 있고, 양보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협상이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다. 일방적으로 하려면 법을 지키고 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통합당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 촉구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박 의장이 이날 낮 12시까지 교섭단체별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 명단 제출에 앞서 상임위원 상임위원 정수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 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1대 국회 광주전남 '1호 법안' · ...지역 현안 '방점'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개원한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상징성이 큰 '1호 법안' 발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개인별 의정목표와 최대 관심사를 반영한 이들 1호 법안에 지역 맞춤형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8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은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최다선인 3선의 이계호 의원(담양·합평·영광·장성)은 대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나주·화순의 신정훈 의원은 '농어업 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법'을 1호 법안

이형석, 5·18 왜곡 처벌
조오섭, 전두환 국가장 배제
이용빈, 군공항이전
김원이, 목포대의대 유치

으로 준비 중이다.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은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광주 군공항을 지역구로 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은 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를 준비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 운영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목포대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행배 의원(광주 광산)은 재난대응사회취약계층지원 기본법'을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를 1호 법안으로 8일 발의할 예정이다.

전남 동부권 주철현(여수)·김희재(여수),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함께 힘을 모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은 법안 관철을 위해 4명의 여수와 순천 의원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실무 간사 역할을 서동용 의원 맡기로 했다.

김희재 국회의원 '국가산단 기업 지역인재 의무화'



김희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전남 여수)은 5일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법안

은 국가산단업단의 입주기업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산단단지 위치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해당 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산단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웅 기자

김정희 도의원, 농어업인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해야



김정희 의원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순천)은 2019년 결산 승인심사 및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 19 발생으로 대부분 농어업인 교육이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희 의원은 "코로나 19로 농어업인

의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일대일 쌍방향 교육을 할 수 있는 화상교육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정터가 올해 300억 이상 매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만 현재 수산물 품목과 임업 업체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20% 내외의 품목을 30~40%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